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05
----------	------

발의연월일 : 2024. 12. 30.

발 의 자 : 박희승·민병덕·김정호
윤준병·김준혁·서영교
정준호·박상혁·백혜련
안호영·김영호·강유정
전진숙·김한규·정진욱
소병훈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징계는 법률이 아닌 관련 지침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지 증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통보 의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징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바 있음.

또한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34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2절에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징계 등)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2.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 5년

3. 그 밖의 사유: 3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에 대하여 다음”으로,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
무와 관련된 사건에”를 “사건에”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

킹범죄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및 징계부과금 사유의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5조의4(징계 등)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u></p> <p><u>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p><u>③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u></p> <p><u>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10년</u></p> <p style="padding-left: 40px;"><u>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u></p> <p style="padding-left: 40px;"><u>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u></p>

<p>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u>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1. <u>감사원</u></p> <p>2. <u>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u></p>	<p><u>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u></p> <p>다.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라. 「<u>양성평등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p> <p>마.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p> <p>2. <u>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 5년</u></p> <p>3. <u>그 밖의 사유: 3년</u></p> <p>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u>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u>에 대하여 다음-----<u>사건</u>에----- ----- -----.</p> <p>1. <u>직무와 관련된 사건</u></p> <p>2. <u>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u></p>
---	---

<p><u>기관</u></p> <p><u>3. 지방자치단체의 장</u></p>	<p><u>위와 관련된 사건</u></p> <p>가. 「<u>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p> <p>나.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p> <p>다.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p> <p>라. 「<u>양성평등기본법</u>」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p> <p>3.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p> <p>4. 「<u>도로교통법</u>」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	--